

도, 전북 시군구 연고사업 국비 43억원 확보

중기부 주관 프로젝트 공모서 김제·순창·남원·장수 등 4개 지자체 사업 선정돼... 지역특화산업 중심 맞춤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도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공모에서 김제, 순창, 남원, 장수 4개 지자체 사업이 선정되어 2년간 국비 43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인구 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지역 연고 산업을 발굴·육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전북에서는 전주, 군산, 원주를 제외한 11개 시군이 해당 지역으로, 도는 기업 활동 인프라 구축, 농촌문화 기

업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김제, 순창, 남원, 장수는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창업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미래 Special 차Car세대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특장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차량 성능·인증시험 지원, 차량 디자인 실차 개발, 근로자 맞춤형 교육, 선행연구 과제기획 등을 추진한다.

순창군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계 농생명 식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컨설팅과 공정 개선을 지원하고, 17기업·1

전담 멘토제를 운영하여 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그린바이오산업 지역혁신 거점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곤충산업 거점단지와 연계한 친환경 바이오소재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유망 기업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제공해 지역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울 계획이다.

장수군은 '레드푸드 전·후방기업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활력센터 및 농군사관학교와 연계하여 노후 설비 개선, 판로 개척지원,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이들 사업을 2월부터 본격 추진하며, 참여기관 및 기업 간 협약 체결과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2026년 지역혁신 공모 예비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통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정부의 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며, "2025년에는 지역 연고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연구원의 지난 1년 발자취

26일 전주대서 '연구 성과·정책 인사이트 행사'

전북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 지난해 연구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연구아젠다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 지난해 폐쇄적이던 연구관행을 벗어 던지고 '성과공유'를 통해 연구가치와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혁신형 개방연구로의 변신을 선언한 이후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두 번째 자리다.

전북연구원은 '2024 연구성과와 2025 정책인사이트' 행사를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전주대학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회식이 열리는 1부 행사는 전주대 JJ아트홀에서 열리며 2부 정책인사이트는 전주대 예술관

403호와 404호, 405호에서 각각 마련된다.

2부 정책인사이트에서는 △생명경제산업선도, 전북의 도전과 응전 △전북 초광역권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혁신 인프라구축 △기후재난과 인구절벽, 차별화된 지역전략 모색 등 3대 부문의 정책제안이 이뤄진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은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도전적 비전과 일맥상통한다"면서 "전북연구원은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새 지평을 열어가기 위한 혁신적인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지역 건설업 활성화

도지사 명의 서한 발송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의 주요 건설사에 도지사 명의 서한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문은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건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의 의지를 담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서한문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건설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며, 지역 건설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공사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자재·인력·장비를 우선 활용해 줄 것을 건설사들에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건설업의 경기 부양 효과를 고려해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 간 상생모형을 구축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전북은 함께 도전하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기업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지역 건설업계와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서한문 발송을 계기로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R&D 분야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 글로벌대학 지역상생사업 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도, 전북대 글로벌대학 지역상생사업 본격화

사업관리위원회 가동... 성과 평가·지속 점검 체계 구축키로

전북대 500억·원광대 750억 지원... 대학·지역 연계 강화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대 글로벌대학에 지원하는 도비를 활용해 본격적인 지역상생사업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1일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R&D 분야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 글로벌대학 지역상생사업 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과제별 성격에 맞춰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북대 글로벌대학 지역상생사업'은 글로벌대학인 전북대에 지원하는 도비 500억원을 활용해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도와 전북대는 '지역상생사업'으로 추진할 과제를 43건을 발굴, 심사위원회 평가와 도와 전북대 간 협의를 통해 2025년 본예산에 19개 사업, 12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날 개최된 사업관리위원회는 사업의 단순한 선정·탈락 개념이 아닌 '지역상생'이라는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실행과 성과 창출을 위한 자문과 토론의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2025년 본예산이 확정된 후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역상생사업' 검토를 지시했고, 전북테크노파크는 자체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해 과제별 보완사항을 제안했다.

이에 도에서는 과제별 부서를 통해 전북TP가 제안한 보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이날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보완이 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글로벌대학을 지역발전의 혁신 엔진으로 적극 활용하여,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업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상생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대학 사업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성장을 촉진하고, 두 대학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북대에는 500억원, 원광대에는 750억원을 지원해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무료 노동법률 상담, 노동권설립, 취약근로자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동권익센터에서는 월 평균 임금 320만원 이하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주 공인노무사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맞춤형 노무컨설팅을 제공하여 △임금현황 분석 △취업규칙 검토 △노동조건 위법 사항 점검 등의 지원을 진행한다.

또한,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아파트 관리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상생협약'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협약체결 단지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 노동권익센터는 지난해 964건의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노동법을 문제로 고민하는 도민은 전북 노동권익센터(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3 나우빌딩 2층)를 방문하거나, 대표번호(063-229-1006)로 문의하면 유선 상담 및 방문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전북 노동권익센터 공식 웹사이트(<https://jla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노동권익센터

무료 노동법률 상담 등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1일 고창식품산업연구원에서 농식품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푸드사이클링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대 글로벌대학 30 지역상생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전북대학교, 바이오융합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주)금성상공 등 식품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미강, 고구마 등 부산물 활용 제품 생산·판매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농산·식품부 산물의 기능성 원료화 기술 △기업 및 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 △위탁생산(OEM) 및 대기업 판로 확보 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업사이클링 제품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규제를 해소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계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적극 지지하며, 보건 의료 발전과 연계한 글로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전주 라한 호텔에서 열린 전북약사회 제71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하계올림픽 유치 퍼포먼스.

농식품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활용

전북,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 육성

전문가 간담회 개최... 탄소중립 실현·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1일 고창식품산업연구원에서 농식품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푸드사이클링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대 글로벌대학 30 지역상생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전북대학교, 바이오융합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주)금성상공 등 식품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미강, 고구마 등 부산물 활용 제품 생산·판매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농산·식품부 산물의 기능성 원료화 기술 △기업 및 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 △위탁생산(OEM) 및 대기업 판로 확보 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업사이클링 제품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규제를 해소



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식품 부산물을 기능성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개발 △산업화 기반 마련 △관련 기업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전북이 국내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기관 및 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